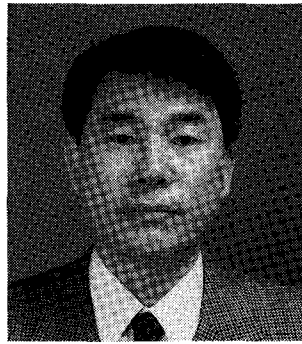


국산녹용 회분율 「강건너 불」 아니다

품질확보, 가격경쟁력 위한 공동시설 시급



주 재 승
한국의약신문 편집국 취재부장

우리나라의 IMF여파에 세계 녹용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생약) 규격집을 개정, 「녹용」의 회분율을 25.0%로 강화하고, 회분율 25.01~35%까지는 「녹용중품」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녹용 유통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녹용 수요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던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녹용 수출국들이 비상이 걸렸다. 실제 뉴질랜드의 경우 녹용 생산량이 최근 2년 연속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들어가면서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소득이 전보다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사슴 농장주들이 녹용 수확을 포기하고 수사슴을 도살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뉴질랜드에서 도살된 사슴은 모두 18만4천두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13만8천두) 대비 약 30%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의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일부의 국내 양록농가는 마치 「회분율 강화」와 「뉴질랜드 녹용 수입량 급감」이 「국산녹용 수요증가」에 호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애써 감추지 않는 듯하다.

더욱이 회분율 강화에 대해선 양록협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협회가 「수입녹용」 규제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다보니 빚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이는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회무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양록협회의 경우 국내 양록농가가 생산하는

녹용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국산녹용 한약화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협회가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판매방식으로 소비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록농가와 국산녹용직판장이 판매하고 있는 「생녹용」 유통방식에서 수입녹용의 주류를 이루는 「건녹용」 유통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결국 중간소비자인 한방병·의원과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양록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산녹용 한약화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지금처럼 축산물로 유통되던 「국산녹용」은 회분율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녹용류는 회분율 규제 규정에 따라 유통되게 되는데 「축산물」로 분류된 「국산녹용」이 조제를 목적으로 투약기관으로 반입되면 그 순간부터는 의약품으로 둔갑(?) 되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국산녹용」이 계속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한약취급기관에선 「국산녹용」을 사용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다.

「국산녹용」 회분율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지적한 대로 뉴질랜드 사슴 농장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시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뉴질랜드 양록위원회는 자국 녹용의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들어가자 곧바로 녹용가격을 환율인상 전가격으로 내렸는가 하면 국내 수입상에선 최고 60%까지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뉴질랜드 녹용을 시료로 연구한 각종 임상자료를 내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15일부터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약사들을 상대로 한 16주간의 「임상한방세미나」다. 이 세미나에선 뉴질랜드 정부연구소인 인버메이 애그리서치가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약사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뉴질랜드 녹용의 수요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사슴 농장들은 좁아진 녹용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질」로 승부하겠다는 복안인듯 하다.

뉴질랜드는 자체적으로 녹용의 등급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분류했는데 그중 「슈퍼(Super) A」와 「A」 등급을 최상급으로 꼽는다. 최근 녹용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최상급인 「슈퍼(Super) A」와 「A」 등급은 오히려 26% 증가했고 하위 등급인 D, E는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 양록농가의 「국산녹용」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걸음마 단계로 보인다.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우수사슴 선발」은 사슴 사육장에서 뿔을 자르면서 사슴의 체중 등을 측정하고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본 심사 역시 현장조사를 근거로 실시돼 녹용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량품으로 꼽혀 왔다. 한마디로 「양적인」 품평회였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양록협회가 올해부터는 녹용의 회분율을 검사해 35%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우수사슴 선발」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즉 회분율 25.01~35%이내가 「중품녹용」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소한의 품질은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 「국산녹용」의 품질 확보는 어렵다는 것이 본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회분율 25%이하만을 「녹용」으로 분류하는 복지부 정책이 한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가 회분율만으로 「녹용」의 직대를 재는 것은 어

불성설이란 이유 때문이다.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분골」과 「녹용」의 상·중·하대는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특정 지표물질도 아닌 「녹용」을 태워 남는 재를 가리키는 회분율로 「녹용」의 등급을 매겨 유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양록업계가 주요 소비처인 한의·약계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어서 하는것도 자명해 진다.

「국산녹용」의 부위별 효능을 「임상실험」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연구는 양록농가가 주축이 된 협회 차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각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이나 정부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등과 용역을 맺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록협회에 구성돼 있는 「연구위원회」엔 각계 전문가들이 망라해 있는데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 협회 예산중 연구 용역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전무하다시피한 것도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이익집단으로서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커야할 협회가 회원 이익을 위한 사업비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록협회가 전국 양록농가를 대표해 「국산녹용」의 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우선 「국산녹용」을 기피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보다 「정책대안」이 앞서야 한다.

국산녹용 품질확보 시급

한의·약계가 「국산녹용」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이 높고, 약효가 떨어진다(외국산에 비해)는 것으로 대별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어느 문헌에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 막연한 이유이다. 그런데도 그같은 「선입견」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양록업계가 타파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바로 이같은 「선입견」이다.

이를 위해선 「국산녹용」의 「품질확보」와 함께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가격경쟁력은 양록협회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국산녹용의 「한약화사업」을 통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국산녹용을 한약화 하려면 무엇보다 대량의 생산·출하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는 협회와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 전국에서 생산되는 녹용을 모아 가공할 공동집하 및 건조·절단 시설을 갖춰 가동하게 되면 국산녹용의 생산단가 역시 하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TO 출범, 그리고 IMF까지 겹쳐 국내 양록농가의 고통은 더욱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녹용의 회분율 규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99년 1월부터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몰라 시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복지부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녹용시장의 90~95%는 「녹용중품」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기에 양록협회가 품질확보 노력과 함께 국산녹용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을 근거로한 우수성 홍보, 공동집하시설 및 가공시설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이뤄낸다면 IMF 「위기」는 곧 새로운 시장확보의 「기회」로 국내 양록농가에 다가올 수도 있다고 믿어진다.

다만 한의·약계가 양록업계의 이같은 자구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해주는 관심도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무심코 쓰는 외국제품
쓰리지는 나라경제